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5. 09. Vol 236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ISO FAR 2015 Goesan
International Organic EXPO+Industry Fair

2015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 기 간 2015. 9. 18.[금]~10. 11.[일] [24일간]
장 소 충북 괴산군 유기농엑스포농원 [괴산군청 앞]
주 제 생태적 삶 - 유기농이 시민을 만나다
Organic Life - Science Meets the Public
주 최 충청북도 괴산군 ISO FAR 공동개최

2015 괴산세계 유기농 산업엑스포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가을산책

얼마나 먼 길 걸어 왔으면
잠자리는 날개마저 투명해졌을까

저녁이 자꾸만 깊어지는데
여울 물소리 잦아드는데
수숫대 대궁이 갈빛으로 짙어지는데
산정부터 붉게 불타는 정적이
안개의 무게로 내려앉는데
날개보다 가벼워진 몸, 이제
어디로 날아가려는가

나뭇잎 잎맥으로 아위는 날갯짓
어디에서 멈추려는가

세상 모든 길은 처음이 아니었음을
시드는 들꽃의 아픔으로 느껴 보는가

멀고 먼 회귀점에서 다시 만난 그대
아, 아직도 그림자 길어지는 길 위에서
삶의 한 구비를 살아 숨 쉬고 있는가



나영순

- 시집 『쥐코밥상』 월간문학 출판부 (2012)
- 산문집 『시간의 잠』 동쪽나라 (2015)
- 전) 한국문인협회 중평지부장
- 전) 청주한우리독서논술학원 청주시지부장
- 현) 청주시 1인 1책 퍼내기 지도강사
- 현) 중평군립도서관 성인독서회 강사
- 독서유공자 문화관광부장관상 수상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5. 09. Vol 236

Contents

- 04 | 제341회 정례회 주요내용
- 06 |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규탄대회 및 토론회
- 08 |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결의문
- 09 |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추진 규탄대회
- 10 | 무상급식 해결을 위한 토론회
- 11 | 학생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 토론회
- 12 |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 13 | 각 위원회 활동상황
- 20 | 제341회 정례회 주요처리의안
- 22 | 대집행부질문 · 답변
- 24 | 5분 자유발언
- 26 |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안내
- 27 | 의정활동 이모저모
- 30 | 의원논단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2015년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
지 충북 괴산 유기농엑스포농원에서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가 개최된다.

- 발행일 2015. 9.
-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언구
- 발행처 충청북도의회
- 주 소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 화 (043) 220-5123
- F A X (043) 220-5119
- 홈페이지 <http://assem.cb21.net>
- 구독신청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우편 주소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의회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제341회 정례회를 열고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안해결에 앞장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정례회 열어 토론회 개최 등 지역현안에 앞장

충북도 · 도교육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문장대 온천개발·수도권규제완화 정책 강력히 규탄

충북도의회가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규탄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도의회는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14일간 제341회 정례회를 열어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 규탄대회 및 토론회'를 실시하고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추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이와함께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주요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도의회는 7월 1일 실시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북도 지사와 충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추진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 윤홍창, 박우양 의원이 대집행부질문을 실시해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관리 철저, 중기지방지정계획 운영·개선방안, 학교용지 부담금 해결방안 등과 ▲충북경제 4%실현, 충북도의 균형발전 방안, 보조금



지원문제, 이란과의 투자협약, FTA 체결에 따른 충북도의 대응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각각 요구했다.

이날 엄재창, 김인수, 장선배, 윤은희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 단위 교육지원 차별화 시정 ▲보은에 동학 관련 지원대책 마련 ▲사회복지 누수차단을 위한 정책 제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충북도가 앞장설 것 등을 각각 요구했다.

7월 6일 실시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제10대 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13명을 선임했다.

이날 선임된 예결특위 위원들은 위원장에 김인수 의원, 부위원장에 김학철 의원이 각각 선임됐고 위원에는 강현삼, 김양희, 김영주, 박우양, 윤은희, 이광진, 이숙애, 임병운, 정영수, 최광옥, 황규철 의원이 선임됐다.

개회 마지막 날인 7월 14일 실시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예비비지출 승인안’ 등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이 의결됐다.

도의회는 또 박우양, 김영주, 엄재창, 윤은희, 이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안을 포함해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실시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이종옥, 임희무, 박병진, 임현경 의원이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철저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기원, 무상급식비에 대한 도지사·도교육감의 결단 촉구 ▲지방교육 괴멸시키는 근무연한 제한지역 확대 전면 반대 ▲교섭단체 조례의 운영 세부규칙 제도화로 실효성 확보 등을 각각 요구했다.

도의회는 또 비회기 중인 7월 16일 최근 불거진 문장대 온천개발 재추진과 관련해 괴산군 청청면 푸른내 문화센터에서 괴산군·충주시의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 범도민 대책위원회,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장대 온천개발 규탄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 상주시와 문장대 온천개발지주조합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향후 전략 대책으로 ▲민·관 및 학계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오수처리 공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 ▲온천수에 다량 함유된 불소 등 기타 수질변화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하천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예측 ▲갈수 유량에 대한 지속적인 측정 ▲하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및 인증 등이 제시됐다.

“충북 수생태계 파괴하는 온천개발 저지에 총력”

충북도의회,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 규탄대회 및 토론회 개최



충북도의회는 7월 16일 괴산군 청천면 푸른내문화센터에서 도의원, 괴산군·충주시 의원,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충북도의회가 충북의 수생태계와 환경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문장대 온천개발과 관련해 개발 반대 규탄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의회는 경북 상주시주조합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문장대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7월 16일 오후 2시 괴산군 청천면 푸른내광장 일원에서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 규탄대회 및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앞서 실시된 규탄대회에서 충북도의회, 괴산군·충주시 의회 의원들과 문장대온천개발저지 범도민대책위, 지역주민 등은 “지난 30여 년간의 투쟁 끝에 대법원의 사업시행 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또 다시 추진하고 있는 문장대 온천개발을 도민과 함께 끝까지 저지 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충북도의회 임희무 행정문화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조용진 한국교통대 명예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조영철 충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일선 문장대온천개발저지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 염우 사단법인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등의 주제발

표와 이두영 문장대온천개발저지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 박관서 괴산청천군민대책위원장, 임순묵 충북도의원, 김해영 괴산군의원, 홍현대 충북도 환경정책과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와 주제발표자, 패널들은 문장대 온천개발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

조영철 교수는 “문장대 온천을 개발하면 상온으로 독성물질이 증가하고 어류가 폐사하는 등 수생태계가 파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로 인한 토사의 하류 유출 또한 수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러한 개발로 오염농도가 높아져 충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온천지 오·폐수는 불소를 비롯한 중금속 오염이 높아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어 주변 농산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염우 상임이사는 “1985년 지정된 530만㎡ 용화·문장대 온천원 보호지구 가운데 용화지구에만 온천공이 있으며, 상주시주조합이 세운 계획에 따르면 ‘문장대 온천관광지는 용화지구의 온천공에서 온천수를 끌어와야 하는

온천수 없는 온천'이라고 발표했다"고 지적한 뒤 "수질 오염총량제가 실시돼 각 지자체에서 '전담팀'을 꾸려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충주 하류 수도권 지자체에 온천개발 사실을 알려 이들과 공조하여 저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박일선 준비위원장은 "문장대 온천개발지인 신월천 상류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괴산주민이 식수원으로 사용해야 온천개발을 막을 수 있다"며 "신월천은 환경부가 인정한 1급 하천으로 오수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돼 있어 소용에서 우월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현대 과장은 "청천면 일대에 문장대 온천개발을 저지하는 현수막을 더 게시하여 반대 열기를 고조할 예정"이라며 "문장대 온천개발을 저지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40m 높이의 저수지를 만드는 방안과 온천 개발시 관광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문경방향으로 보내기 위한 오수관로 설치도 구상·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순목 의원은 "자연환경 보전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이라며 "온천개발사업이 인간과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주조합에서는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은 "문장대 온천개발은 하류지역 수질오염을 불러와 괴산군의 역점사업인 유기농업에 피해를 준다"며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온천개발을 반드시 저지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두영 준비위원장은 "문장대 온천개발지의 온천수는 불소가 기준치 이상 포함돼 있어 온천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SNS 등으로 홍보하고,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휴가철 괴산을 찾는 관광객 등에게도 반대의지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며 "대구 및 수도권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온천개발 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과 충북도에 힘을 응집할 수 있는 반대 기구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방청객들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문장대 온천개발지의 부지를 충북도에서 매입해 휴양림 등을 조성하여 개발을 저지하

자는 의견과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충청도민의 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나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는 의견 등 여러가지 의견을 제기했다.

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향후 전략 대책으로는 ▲민·관 및 학계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오수처리 공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 ▲온천수에 다량 함유된 불소 등 기타 수질변화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하천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예측 ▲갈수 유량에 대한 지속적인 측정 ▲하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및 인증 등이 제시됐다.

도의회는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8월 20일 대구지방환경청이 경북도가 제출한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충북도의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부동의' 처리를 강력히 요구한 우리 충북의 입장에서는 '부동의' 결정이 나오지 않아 아쉽지만, 일단 온천 개발 사업에 큰 제동이 걸리게 되어 그나마 다행으로 본다"며 "반려"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온천개발을 거부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도의회는 또 "새누리당 충북도당 경대수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온천법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온천 관련 부서를 안전행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도록 요구함은 물론, 범도민대책위원회와 더불어 문장대 온천개발이 완전 폐지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7월 16일 괴산군 푸른내문화센터에서 도의원, 괴산군·충주시 의원,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를 위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청적지역 환경을 파괴하는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도의회,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결의문 채택

충북도의회는 7월 1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의해 상정한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채택한 건의문은 문장대 온천개발지구조합이 개발을 재추진하려고 지난 6월 10일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 평가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적지역 괴산군의 환경보호 ▲지역주민들의 공익을 고려한 온천개발 반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2003년과 2009년에 대법원에서 개발허가 취소 확정판결

을 받았음에도 최근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구조합에서 개발을 재추진하고 있다”며 “관광지 개발로 인한 대규모 환경재앙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괴산군의 자연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장대 온천 조성사업은 소수의 사익을 위해 다수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뒤 “식수원 오염, 관광자원 훼손 등 대규모 환경재앙을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의결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의 행정자치부,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등에 전달했다.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결의문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은 이미 2003년과 2009년에 하류지역 수질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환경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개발허가 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동안 직·간접적 피해를 받는 지역인 괴산군 청천면은 물론 충청북도 차원에서도 명확한 반대의를 표명하고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해왔다.

하지만,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구조합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인 메르스 사태로 인한 혼란을 틈타 슬그머니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하고 다시 관광지 조성사업을 수면위로 올려 심각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

괴산군은 전 세계적으로도 소음과 공해가 없는 청정 지역으로 어디를 가도 싱그러운 바람과 맑은 물, 푸른 숲이 있는 계곡이 많으며, 금년 9월에는 2015년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후

손들에게 물려줄 환경적 자산이 가득한 고장이다. 이대로 조성사업이 진행된다면 소수의 사익을 위해 다수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식수원 오염, 관광자원 훼손 등 대규모 환경재앙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한 채 청적지역 괴산군의 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괴산군의 자연환경을 지켜내기 위하여 충청북도, 괴산군,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온천개발 저지 관련 대책위원회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온천개발 움직임이 철회될 때 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주민들의 환경권을 수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아갈 것을 결의하고 천명하는 바이다.

2015년 7월 1일

충북도의회 의원 일동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대원칙 외면하지 말라”

도의회,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추진 규탄대회



충북도의회는 7월 1일 도의회 현관앞에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추진 규탄대회」를 갖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충북도의회는 7월1일 도의회 현관앞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한범 도의회 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추진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규탄대회는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축소 ▲도시첨단산업단지 수도권 추가 지정 ▲GB 해제 취약지역 용도제한 완화(준공업지역 허용) 등 수도권 규제 법령의 개정과 ▲현대차 한전부지 개발절차 축소 ▲용산미군부지 개발 지원대책 발표 등 노골적인 수도권규제완화 및 투자활성화 정책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도의회는 정부가 과거에 경제개발 최우선 정책과 거점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인구와 산업의 기형적 수도권 집중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 1982년 수도권정비법 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고 ‘선(先) 지방 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원칙을 표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정부 들어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아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역의 왜소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언구 의장은 규탄대회에서 “정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국민이 모두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대원칙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밤낮없이 땀 흘려온 비수도권 지역 국민들의 열정

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의 이용·개발과 지역경제의 육성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이며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지켜내야 할 대국민 합의이자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총 일곱 차례

에 걸친 투자·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를 통해 사실상 수도권규제완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지난 30여년간 수도권 규제 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지역내 총생산(GRDP)의 50%, 정부투자기관의 89%, 100대 기업 본사의 95% 등이 밀집해 있어 경제·사회적 인프라의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다시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게 되면 인구 및 기업의 수도권 과밀화·집중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 및 공동화 현상은 가속화 된다”며 “모든 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심화돼 단순한 지역 간 불균형 차원을 넘어 비수도권의 수도권 예측화라는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또 160만 충청도민의 염원을 담아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 중단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정책 우선 추진 ▲지방분권 정책의 강력한 추진등을 촉구하고,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에 힘을 불어 넣어, 향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도의회, 무상급식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충청북도 · 도교육청 관계자, 교수 등 초청해 의견 수렴



충북도의회는 8월 13일 충청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도와 도교육청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을 초청해 '무상급식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도의회는 8월 13일 충청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도와 충청도교육청 관계자, 민간사회단체, 청주시학부모회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상급식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에 대한 갈등으로 무상급식이 중단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충북도와 도교육청간 갈등을 해소하고 도내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와 불만이 확대되고 있음을 집행기관에 알리며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회무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박은상 충북도 정책기획관과 신경인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발표자로 나섰고, 패널로는 남기현 충청대 교수와 주종혁 청주대 교수 백종면 한국교통대 교수, 이유자 충북도 학부모연합회회장 등이 참여했다.

임 위원장은 “충청북도는 전국 최초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해 무상급식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문제를 겪으며 도민들에게 큰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한 뒤 “도의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양 기관의 갈등을

조정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취지”라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양 기관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2014년 합의서 효력'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성격에 대한 날선 설전이 오갔다.

충북도는 “국비 72억 원이 포함된 것을 인정한 2014년 합의서가 유효하며, 무상급식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됐고, 따라서 충북도가 인건비까지

지원하면 이중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72억 원을 국비라 인정한적 없으며, 지방재정교부금 역시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예산이어서 국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 추천패널로 참석한 백종면 교수는 “지방재정교부금은 넓은 의미로 보면 국비로 볼 수 있지만, 용도가 제한되지 않아 교육부가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을 했다.

충북도 추천패널인 주종혁 교수는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근거로 “무상급식 인건비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식품비를 양기관이 분담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 외에도 유철웅 충북민간사회단체연합회장은 “정부에서 지원한 나머지를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문정옥 청주시학부모연합회 부회장은 “급식비 부담이 어렵지 않은 가정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사회를 맡은 임회무 위원장은 “충북도의회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양 기관의 입장과 전문가·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중재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 교복구매 개선·진로교육 진흥 방안 모색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월 2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월 2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충청북도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영수 의원을 중심으로 5명의 교육위원

회 의원이 공동 참여해 수행한 '충청북도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 실태조사 및 정책에 관한 연구'의 책임을 맡았던 김관호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김영호 교수를 좌장으로 충북도교육청 김흥준 장학관, 충북 학교학부모연합회 이유자 회장, 충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주대중 사무처장, 청주교복연합회 장만희 회장,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혜란 팀장이 참여해 토론회를 펼쳤다.

주제발표에서 김관호 박사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에 대한 홍보, 가격, 품질, 입찰, 사후관리, 투명성 등의 기준 도입과 표준화가 중요한 정책개선"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상한가를 정하고 학교장·학교 운영위원회·업체가 가격 협의 후 개별구매 △학생·학부모의 의견 반영과 다년제 계약 △공동구매 신청서 제출 후 취소 방지 방안모색 △3년간 서비스제공 등이 제안됐다.

정영수 의원은 "교복 학교주관 공동구매제의 종합 시스템을 체계화 할 것과 지역 교복업체가 학부모들이 신뢰·만족하는 제품생산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북도 진로교육 진흥 정책 토론회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월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진로교육 진흥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월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윤홍창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도의회사무처와 도교육청 관계자, 진로교사,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진로교육 진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체험교육과 정책을 모색하고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지역유관기관 간의 진로교육환경 조성·지원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충청북도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숙애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석인숙 도교육청 진로인성교육 장학관의 「충청북도 진로교육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란 주제발표에 이어 심재희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이병선 청주MBC부장, 이교배 진로진학상담교사, 김종기 CJB 보도국 편집팀장, 전향선 세광고등학교 학부모, 민창영 사회적기업 새움 대표, 이덕항 충청북도청 청소년지원팀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벌였다.

이숙애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진로직업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말하며, "진로직업교육은 단순한 직업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찾고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아이들의 관점에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10대 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충청북도의회는 7월 6일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제10대 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3명을 위촉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선거구 및 각 상임위원회 안배 등을 감안하여 선임됐으며, 선임일로 부

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은 위원장에 김인수 의원, 부위원장에 김학철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에는 강현삼, 김양희, 김영주, 박우양, 윤은희, 이광진, 이숙애, 임병운, 정영수, 최광옥, 황규철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김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정 각오

“도민복지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최선”



김인수 위원장

부족한 저에게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결산을 종합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경제는 메르스 및 그리스 디폴트 선언으로 인한 수출부진 및 소비급감 여파로 성장률을 3.0% 이내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지방재정자립도의 지속적 하락 속에서도 서민복지정책의 추진과 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 재정지출 요인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

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감시를 통해 도민복지를 실현할 책무가 있으며 우리 앞에 놓여진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차단해 서민 복지 실현과 학교 무상급식,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등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



강현삼 의원



김양희 의원



김영주 의원



박우양 의원



윤은희 의원



이광진 의원



이숙애 의원



임병운 의원



정영수 의원



최광옥 의원



황규철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제34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심사·의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한범)는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 2차례 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제10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을 심사·의결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제10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는 도의회에 제출되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기능을 수행할 제10대 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예결위원들의 활동기간을 선임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를 13명 이내로 정하기 위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에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운영과 생산적인 의회구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실시한 「2014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서는 2014년도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액은 충청북도 예산현액 3조 9137억 885만 8000원의 0.2%인

86억 2487만 9000원으로, 이중 82억 4455만 9000원을 집행(95.6%)했으며, 2100만원의 이월액과 3억 5931만 9000원(4.4%)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위원회는 세입 결산액 270만 4000원, 세출결산액 86억 2487만 9000원 원안대로 심사·의결했다.

운영위원회는 또 지난 회기에 「충청북도의회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도의원 신분증의 의회마크 ‘議’자를 ‘의회’자로 변경하기 위한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의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그리고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9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개최하기로 하고 부의안건 처리,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의 주요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실시된 간담회에서는 박한범 의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등 개인연구 계획 2건을 심사하고 임병운, 최병운 의원의 연구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등 2건의 의원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 받았다.



운영위원회는 7월 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대 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전 간담회를 실시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41회 정례회

하반기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 당부



정책복지위원회는 7월 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관리실 등 8개 소관부서로 부터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봉순)는 제341회 정례회를 열어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주요 현안을 심사·의결하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7월 2일과 6일에는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예산의 정확한 편성과 투명한 집행으로 불용액의 최소화로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애써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민간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경상보조금 또는 행사보조금의 경우 풀(Pool)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있지만 집행 잔액이 80%이상 발생하고 있음과 연구용역비(Pool)의 경우도 매년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일단 세워놓고 보자식’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세부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한 후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불용액이 35억 원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교육청에 조속한 정산분 지급을 촉구하고 아울

러 재정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조속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7월 6일과 7일에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추진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상반기 실적에 미흡한 일부사업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시·군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군으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경우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분되어 부익부 빈익빈 상황을 초래하고 있어 도내 낙후지역을 배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고 지방공기업의 지속적인 채무관리에 대한 강화 방안 마련과 공공성과 사업성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충북개발공사의 역할과 범위 설정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여성정책관실 등 소관 집행부서와 현안 간담회를 열어 ‘충북 미래여성 플러스 주차용지 확대 방안’에 대한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보고 받고 주차장 조성에 따른 여성계 의견수렴 내용 반영여부 및 인근부지 분할 추진방법, 토지매입 절차, 예산투자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41회 정례회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등 개정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희무)는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조례안 심사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충청북도 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 했다.

또 최근 현안으로 불거진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 규탄 대회 및 토론회'와 '무상급식 해결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먼저, 김영주 의원은 행정국 소관 결산과 관련하여 “청원·청주 통합추진단 같이 조직개편이나 특별한 사유로 없어진 조직이 결산서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사전에 예산의 이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정리해 결산서 상에는 포함 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연철흠 의원은 행정국 소관 세금 과오납 부과와 관련하여 “착오부과와 이중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찬과 교육 등으로 세

금 과오납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도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은희 의원은 직원 건강검진 예산과 관련하여 “2014년도 건강검진 대상 직원 235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해 예산이 남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직원들의 인식 개선 및 독려로 직원 건강은 물론 예산의 낭비도 막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엄재창 의원은 행정국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출장소 조직의 기형적 형태로 인해 지역균형발전과 도민편의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하고 “조직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도민편의를 위한 출장소 조직개편을 검토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광옥 의원은 충청북도 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조직이나 역량이 약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참여 확대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7월 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의결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41회 정례회

‘상하이 사무소’ 중국 수출 전초기지화 촉구



산업경제위원회는 7월 6일 충북도농업기술원 수박연구소를 방문해 현황을 듣고 아치형 미니수박 시험재배 현장을 살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양섭)는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충청북도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7월 2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 박우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 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과 접목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함은 물론 농촌을 활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실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운영을 주문했다. 특히, 예비비 지출은 사전에 의회의 충분한 동의를 얻어 엄격하게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7월 3일 실시한 경제통상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에서는 “충북도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충북

경제 4%실현을 위해 대중국 수출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개소한 상하이 사무소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이란 컨소시엄 투자협약에 대해 핵문제가 해결된 점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 7월 13일 농정국과 충북도 지방기업진흥원, 충북도 지식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등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며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도내 대학생 취업에 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과산세계유기농엑스포의 사전입장권 판매와 관련해 “국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중국 상하이 사무소를 통해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초청해 충북도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농산물을 중국 등에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41회 정례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 사업집행 촉구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병진)는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에서 신설된 재난안전실이 충북의 재난관리 분야를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과 중부내륙 철도의 충주를 통과하는 구간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으로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는 대응과 사업추진을 당부하고 메르스(MERS) 환자수송에 참여한 구급대원의 안전에 유념하는 매뉴얼, 장비,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신규 사업 발굴과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등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또 균형건설국 예산특성상 사전행정절차가 진행돼야 하지만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과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국지도 확·포장사업 등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부터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대기오염망 구축사업 미집행에 따른 조기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그리고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대안사업 지원으로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어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또 7월 1일 청청지역 괴산군의 환경보호와 지역주민들의 공익을 고려하여 문장대 온천개발을 반대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7월 13일 온천공을 방문하여 현황과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과수온 등 온천지구 개발 사업장을 둘러보며 개발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병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6월 26일 행정 예고된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7월 13일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듣고 현장을 살펴본 후 개발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제341회 정례회

도교육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위원장
윤홍창 의원



부위원장
정영수 의원



김양희 의원



이광희 의원



이숙애 의원



이종욱 의원



교육위원회는 7월 7일 충청북도교육청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현안을 처리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홍창)는 제341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2014 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김양희 의원은 마이스터고 운영과 관련해 전년 대비 예산이 더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정확한 이유·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이종욱 의원은 3세대 하모니자원봉사자나 배움터지킴이와 같이 자원봉사자 위촉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고 퇴직금도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이숙애 의원은 성인지 예산편성 목표 설정이 2014년 33%로 감소된 사항과 집행실적 및 내역에 대한 분석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향후 수혜를 분석결과를 반영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과 성과목표를 계량화 시킬 것을 당부했다.

이광희 의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49억 원 정도가 감소한 이유를 묻고 지방교육재정 악화에 따른 대책마련과 예산절감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홍창 위원장은 2014년 8월말 기준 광역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에 법정 전입금을 전출한 실적현황을 보면 충북도는 전국 최하위 실적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월 7일 실시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영수 의원은 교원행정업무경감의 실질적 추진을 강조했고, 김양희 의원은 교육수혜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홈페이지 관리의 체계성 구축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도교육청의 민원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주문하고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사전예방 지도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와 예산삭감에 따른 교육정책 개발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설명을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41회 정례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수)는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인 7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위원회를 열고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 중 세입예산은 3조 9137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4%인 4조 403억원을 수납했고, 이중 일반회계는 3조 4656억원으로 85%가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5634억 원이며 전년도(2013회계연도)보다 6%인 2273억 원이 증가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의 92.8%인 3조 6330억 원을 집행했다. 이는 일반회계 3조 1821억 원(87.6%), 특별회계 4507억 원으로 전년도(2013회계연도)보다 3.9%인 137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6%인 2193억 원이 발생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960억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1%이며, 이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587억 원(14.8%)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7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3366억 원(85%)이다.

또한,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안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 2조 24316억 원 대비 2조 4212억 원을 수납했고, 세출예산은 예산현액대비 92.7%인 2조 2552억 원을 지출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59억 원 중 명시이월사업비 755억 원, 사고 이월비는 203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도의 예비비지출을 승인하며 일부 리모델링비와 설계용역비로 지출한 것을 지적하고 예비비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당초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 등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인 만큼 그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예비비 집행 시 도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김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의 방만한 운영으로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거나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감시·견제할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8일과 9일 이틀간 위원회를 열고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주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구성목적 : 의회에 제출되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 위 원 수 : 13명 이내로 한다

[주요내용]

- 1년씩 상설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예산결산 업무에 대한 심사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해 나가고, 심사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의회의 예산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이 종료(2015. 9. 31.)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협약을 추진

[주요내용]

- 수탁기간 : 2015. 10. 1 ~ 2018. 9. 31(3년간)
- 위탁사무 : NGO활동을 위한 회의, 교육, 정보검색 등 편의 시설 운영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박우양 의원)

[제안이유]

-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과 접목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함은 물론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

[주요내용]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 체험마을 등의 지원 및 지원내용
- 체험마을 사업 활성화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
- 시장·군수가 체험마을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 규정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권한 위임사무를 정비

[주요내용]

- 위임권한 환원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 3건
- 위임(도지사 → 소방서장) ⇒ 권한 환원(도지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

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발명진흥법에서 특허권 포기에 대한 규정 신설 등

[주요내용]

- 도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포기 근거 마련
- 특허권의 '포기' 조항 신설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윤은희 의원)

[제안이유]

-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

[주요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둬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영주 의원)

[제안이유]

- 「문화재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
- 분과위원회 수를 불필요하게 제한하였던 조례 규정을 개정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서 '역사문화환경' 신설
-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기능 중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삭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의영 의원)

〔제안이유〕

- '투자유치자문단 수 30인 이내' 규정을 삭제해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자문단 인원수 삭제
-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사항 반영하여 이를 삭제

2014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2014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심사·의결

〔주요내용〕

- 세입결산액: 2,421,187,193,600원
- 세출결산액: 2,255,243,814,800원
- 세계잉여금: 165,943,378,800원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제출자: 충북도지사)

〔제안이유〕

- 숙련기술의 향상 촉진과 숙련기술인이 맡은 분야에 정진하도록 충청북도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숙련기술인 우대 및 육성방안을 마련

〔주요내용〕

- 충청북도명장 정의
- 매년 5명 이내로 충청북도 명장 선정계획
- 명장 자격요건 및 추천 • 예우 및 지원 및 위원회 구성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충북도지사)

〔제안이유〕

-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신기술개발 사업화 촉진을 위한 펀드에 출자하기 위함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설명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 기금의 관리·운용 중 투자조합 출자금 추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금
- 기금의 지원대상자 추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제천종합연수타운 사업 타당성 용역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제천시에서 대안사업을 건의해 지원 완료함에 따라, 제천연수타운 조성사업은 대안사업 지원으로 사실상 종료되어 본 조례의 기능이 상실

〔주요내용〕

-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2014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승인

〔주요내용〕

- 지 출 결 정 액: 1,615,038,000원
- 지 출 액: 1,103,567,680원
- 잔 액: 511,470,320원

2014회계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2014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집행결과인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세입결산액: 4,029,072백만원
- 세출결산액: 3,632,975백만원
- 세계잉여금: 396,097백만원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임재창 의원)

〔제안이유〕

- 「건축법」개정에 따라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

〔주요내용〕

- 건축법 적용의 완화 규정 신설

2014회계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2014 회계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및 학교용지부담금 해결 방안 마련 촉구

윤 홍 창 의원
(교 육 위 원 회)



순세계잉여금 발생 관련

질문 | 순세계잉여금 발생금액의 주요 내역인 초과세입금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539억 원에서 2014년 결산에서는 약 2배에 가까운 1073억 원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변 | 2014년에 부동산 거래량이 예년보다 많이 증가하면서 지방세 수입이 많이 증가되었고, 지방소비세 세율이 5%에서 11%로 늘어남에 따라서 초과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질문 | 지난 3년간 순세계잉여금은 평균 1402억 원이었으나, 2014년도 결산액은 2252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근절방안과 건전재정운영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 미집행예산에 대해서 사전 예고제를 통해 집행잔액이 안 나오도록 경고하고, 조기발주 개념을 도입해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질문 | 2013년~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014년 세입지방세추계액은 6972억 원인데 예산액은 7252억 원으로 580억 원정도 증가했고, 결산액은 8547억 원으로 추계액보다 1575억 원 추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국가의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지방이 독자적으로 자체 재원을 근거로 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질문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와 가용재원 규모 판단을 통해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예, 맞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계획이 실제 예산결산과 맞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관련-도지사

질문 | 학교용지매입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 학교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아직도 충청북도에서 부담하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가 549억 6900만원으로, 2014년도 교육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 27.17% 대비 충북은 60.6%로 16개 시·도 중 최하위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일시에 다 상환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상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 행정자치부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액에 보전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답변 | 보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일정 금액을 상환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용지매입비 관련-교육감

질문 |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학교설립 현황과 도에서 부담한 학교용지매입비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답변 | 2000년 이후 41개교를 신설하고, 학교용지매입비 총 금액이 1813억 정도 되는데 그중 도에서 받지 못한 금액이 549억 6900만원에 이릅니다.

질문 | 2014년도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담금 전입률이 16개 시·도 중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학교가 정상적으로 설립이 됩니까?

답변 |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사업에 써야 될 것을 돌려서 우선 학교부터 지을 수 있도록 해 줘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질문 |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담 전입금 비율이 전국 최하위인데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답변 | 약 16회에 걸쳐 공문을 통해 전입을 요구하고, 교육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행정협의회 의제로도 올릴 생각입니다.

질문 |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아이들과 도민들을 생각하고 타 시·도의 해결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조속히 학교용지부담금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한 기업의 BSI 제고 방안촉구

박 우 양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충북경제 4% 실현 관련

질문 | 충북도가 4% 충북경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내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전국과 비교해 낮습니다.

BSI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청년실업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 민선 6기 출범 후 약 6조 3천억 원을 투자유치했고 최근 충북으로 본사를 이전한 셀트리온제약 등의 대기업을 기반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기업체감경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절벽 해소대책과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시책을 전문가들과 함께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북도의 균형발전 관련

질문 | 도지사님의 공약대로 특별회계를 단계적으로 10%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계획과 향후 낙후지역의 군비 부담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비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 충북도가 추진 중인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발전도에 따라 도비를 70%~55%까지 차등 지원하고 나머지를 시·군비로 부담시키고 있으며, 시·군비의 부담은 시·군의 책임성 확보, 효과성 있는 사업발굴, 도의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2017년도를 기준으로 도의 재정 여건과 시·군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특별회계의 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란과의 투자협약 관련

질문 | 이란과 MOU 체결 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물렸었는데, 충북도는 언제쯤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와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무엇입니까?

답변 |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란 측의 투자실행 시점에서는 미국 등의 제재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미·이란의 협상타결 지연으로 최초 투자금의 국내 반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완전 해결까지는 금년 연말경으로 예상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및 조속한 경제제재 해제를 위하여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서 ‘동 제재’ 상의 예외조치가 이뤄지도록 정부(산업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 보조금 지원 관련

질문 | 건전한 보조금 집행 및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충북도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 |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정사례 적발 시 경중에 따라 최대 5년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하겠습니다. 또 지속적인 감사로 보조단체들의 부정한 보조금 수령과 부실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TA 체결에 따른 충북도의 대응

질문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 진행현황과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규모와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 최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한·중국 FTA 등 타결된 협정까지 포함할 경우 총 15건의 FTA가 발효·타결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FTA 위기를 농업발전의 기회로 삼아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추진해 2018년 농산물 수출 목표 8억달러 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질문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많은데 향후 도의 노력과 계획은 무엇이며 충북도가 직접 최저가격 보장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2013년에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를 제정해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벼 재배농업인에게 헥타르 당 7만원씩의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2018년까지 1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최저가격을 보장 조례 제정은 지양하고 농산물 수급안정과 적정한 가격유지를 위해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하는 시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5분

자유발언



엄재창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도교육청은 교육지원 차별화를 시정하라!

최근 우리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에 따른 학력의 양극화, 도시위주의 편향된 교육정책 등 교육행정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지났다고들 합니다.

도교육청은 재정이 열악한 도내 단양,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군 1만84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꿈꿀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정부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여 재

정자립도가 열악한 위 6개 군 지역에서는 돌봄교실 등 6개 사업이 반토막 나고 말았습니다.

도의회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자체재원 투입을 주문했지만 교육청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열악한 군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꿈조차 접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빈부로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어느 나라 교육방식이며 의회의 시정요구를 묵살하는 도교육청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교육감님께서는 모든 학생들이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보은에 동학 관련 지원대책 마련하라!

동학농민혁명은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계 농민들의 주체로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지배층의 분열과 부패한 관리들의 횡포를 타개하기 위하여 '인내천(人乃天) 사상'과 '천심즉인심(天心卽人心)'이라는 교리를 내건 동학의 가르침은 학정에 시달리고 가난에 목매던 백성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2015년 올해는 동학농민혁명발발 121주년을 맞이하여, 늦은 감은 있지만 충북도가 선도적 입장에서 보은동학농민혁명 운동을 재조명하고 보은동학의 역사성과 동학의 중심이 보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시키고 도지사님께서 앞장서서 이를 실천에 옮겨 주실 것을 보은군민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동학농민군의 추모행사인 '보은동학제'의 허술한 실체 파악과 동학군 집단 매몰지 발굴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학의 역사적 복원사업 등을 비교분석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재평가를 받고 있는 보은지역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와 재정적 지원이 절실함을 감안한 대책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장선배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사회복지 누수 차단을 위한 제언

저는 계속되는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 누수를 차단하고 각종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충북도 조직개편에서 복지사업관리팀이 신설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사업관리팀을 중심으로 장애인, 노인, 아동·보육은 물론 도내 시·군 및 민간협의체와 함께하는 업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먼저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회계, 노무, 인권 등 각 분야별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모범적인 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리가 드러난 시설에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그동안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법인운영 분야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회계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유사·중복성이 있는 복지사업의 정비 방안, 새로운 복지 수요 발굴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 강구 등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연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윤은희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즈음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2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 시행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법이 바뀌는 것은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여성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을 의미합니다.

도는 '여성친화도 충북' 선포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여 타 시·도에 비해 선도적 여성정책을 펼쳐왔다 할 수 있으나 공무원 인식과 관심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건설 중인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및 여성재단 설립과 관련해 애로가 많겠지만 완공과 함께 여성정책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운영방식과 충북에만 없는 여성재단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는 지난해 30개 기업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정작 자신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가 먼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시행정직 양성평등정책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 집행입니다.

도가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보일 때 충북의 진정한 양성평등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욱 의원
(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최근 3년간 전국 학교와 학원 등 교육연구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1,046건으로 매년 300여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발생한 유치

원·초등학교 등 각급 교육기관의 학교안전사고는 11만 6천여 건으로 2012년과 2013년에 비해 학교안전사고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재사고의 원인별 분석을 통해 화재사고예방 시설을 개선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여름철 물놀이 및 수련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와 같이 도교육청에서는 실질적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시스템 구축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무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를 염원하며...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유기농 식품'을 넘어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기농 호텔, 휴양림, 실버타운 등의 친환경 산업을 괴산과 충북에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괴산과 충북을 유기농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청정한 자연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문장대 온천개발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환경재앙을 막고 괴산과 충북을 유기농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한 것입니다. 각종 악재를 물리치고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내부의 단결과 협력, 외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가 더 능동·적극적으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비 분담문제로 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장기화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자녀를 둔 학부모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 입장에서 도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용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박병진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지방교육 괴멸시키는 근무연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

도교육청에서 지난 6월 26일 홈페이지에 행정예고하여 시행 예정인 ‘초등교육공무원 근무연한 제한 지역 확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 안의 철회를 촉구합니다.

본 안의 표면적인 명분은 인사관리의 통일성과 합리적 인사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이나 그 이면에는 도심권 교사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벽지·농어촌점수 취득 정책에 불과하며 군 지역, 특히 영동군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경력교사들이 대거 외지로 전출가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영동군 교육의 앞날은 암흑이나 다름없을 것이며 영동군의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신임교사나 외지인이 올 경우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학업만족도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 타 시·도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강제적인 인사교류정책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인사교류가 꼭 필요한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정확히 분석해 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인사교류제도를 적극 발굴·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임현경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교섭단체 조례의 운영 세부규칙 제도화로 실효성 확보해야

충북도의회 출범 때부터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원구성에 대한 싹쓸이 현상이 이번에도 예결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독식하며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의회가 부활한지 25년만에 처음이자 최악이며, 그 중심에 있는 의장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쫓기 때문입니다.

이번 예결위원장 선임과정에서 위원장을 새정치민주연합에 배려해 싹쓸이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임에도 이를 실행하지 못해 제10대 도의회는 승자독식주의만 존재하게 됐습니다. 도의회는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내가 이기는 제로-섬(zero-sum)이 아니라 경쟁과 타협 속에서 양자가 상생하여 판을 키우는 포지티브-섬(positive-sum)으로 가야하며 의장은 여·야를 떠나 의원들의 갈등요인 조정과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교섭단체의 구성규정만 담겨있고 운영사항, 세부규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돼 이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며, 도의회가 협력과 경쟁을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포지티브-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생태적 삶, 유기농이 시민을 만나다!

2015 괴산

세계유기농 산업엑스포

ISO FAR 2015 Goesan
International Organic EXPO+Industry Fair







윤홍창 · 장선배 의원 우수 의정활동 대상 수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 인정



충북도의회 윤홍창 · 장선배 의원이 8월 12일 「제2회 전국 시도의회 협의회 우수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충북도의회 윤홍창 의원과 장선배 의원이 8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 2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우수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 의정활동 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조례제정, 대집행부질문, 5분 발언 등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시·도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윤홍창 의원은 올바른 충북형 혁신학교만들기를 추진

하고 세명대 하남제2캠퍼스 설립 추진을 저지하는 등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노력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으며, ‘충북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및 교육지원방안’ 등의 의원단체연구에 참여하여 교육 현안문제를 진단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등 연구하는 의정활동이 높이 평가 받았다.

윤의원은 “앞으로 더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장선배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정, 충북 취약계층 아동 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연구,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예방 및 근절 방안 연구 등 활발한 입법·연구 활동을 추진하여 도정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책방향과 폭넓은 비전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 의원은 언제나 처음 시작의 마음가짐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더 열심히 나아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유기농의 진정한 가치를 전하다”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포장파르’

기 간 : 2015. 9. 18(금) ~ 10. 11(일), 24일간

장 소 : 괴산군 유기농엑스포농원 일원(괴산군청 앞)

관람객 : 66만명(내국인 62, 외국인 4)

기업체 : 250개 기업(국내 190, 해외 60)

내 용 : 주제전시, 야외전시, 유기농 醫·美관, 유기농산업관, 국제학술행사, 유기농 체험·문화공연 등





▲ 충북도의회 이연구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8월 18일 을지연습 중인 충무시설을 방문해 현황을 듣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업경제위원회는 7월 6일 단양군 어상천면에 위치한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마늘연구소를 방문해 현황을 듣고 마늘교배 육종포장을 살폈다.



▲ 충북도의회는 제341회 정례회 회기 중인 7월 7일 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실시했다.



▶ 충북도의회 이연구 의장과 도의원들이 8월 13일 충북도의회를 방문한 박학래 서울시의회 의장 일행과 함께 문장대 온천개발 예정지를 방문해 현황을 설명하고 개발 저지 협조를 당부했다.



▲ 충북도의회는 7월 10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판문점과 제3땅굴 등 안보현장을 견학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장, 박종규 부의장, 임순목 의원 등이 7월 9일 충주 정다운요양원과 성심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충북도의회는 7월 1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와 민 주적 미래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장은 8월 11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향토기업 한국도자기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장은 7월 22일 '충청북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후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지역균형발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높여야!



황 규 철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옥천은 약 5만 3,000여 명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업군(郡)으로 군 전체 면적의 약 67.7%가 농림지역으로 청정·친환경 농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대청댐 건설로 토지이용 규제가 강화되는데 그 원인이 있는데 주변을 개발제한구역, 수자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실제 공적규제지역이 군 전체면적의 약 8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소로 작용함은 물론이고 수 십 년째 주민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지역발전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속에 충북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저발전 지역을 선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만의 전략산업을 지원하거나 균형발전 공모사업 지원, 또는 행복마을 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는 작년 통합청주시의 출범으로 청주시에 경제, 산업, 문화, 예술 등이 모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 특히 군 단위 지역은 점점 소외되고 낙후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충북도가 저발전 지역에 대해 균형발전 사업의 지속 지원과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다양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충북도는 올해 도시와 농촌, 청주권과 비청주권

이 모두 함께 하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도내 저발전 지역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5년간 약 2545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옥천군에는 의료기기를, 보은군에는 스포츠, 영동군에는 국악·와인 등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충북도의 노력은 민선 5기에 이시종 도지사의 공약이었던 남부권·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옥천과 제천에 출장소를 설치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편의 시책 발굴,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 건설업, 대기·수질 환경 분야 민원처리, 어자원 보존 및 치어방류 분양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전개함은 물론 지역 주민과 소통협력을 통해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 주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미흡한 사업들을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를 조속히 추진하여 기업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옥천군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는 수변구역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도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수자원·상수원 보호구역 등 수자원 보호를 위해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친환경 농업의 지속적 추진과 지원으로 특화된 농업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척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이 모두 해결되면 옥천군은 물론 같은 남부권인 보은군과 영동군도 함께 상생 발전하여 민선6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충북의 권역별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세계를 설득한 반기문의 시선

임 헌 경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노자는 생명과 자연을 중시하는 대표적 사상가이다.

‘무위자연(無爲自然)’으로 상징되는 노자의 도(道)는 한마디로 세상의 이치를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생래적으로 터득해야 한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

이는 어떠한 인위적 파괴를 거부하고 세상만물의 생명 존중, 그리고 생명의 기반인 자연을 보전해야 한다는 도덕적 실천행위로 연결된다.

반기문 총장이 오바마 미국대통령에게 생일선물로 건넨 휘호 ‘상선약수’는 노자의 말대로 옮기면 ‘최고의 선(善)이란 물과 같다. 물이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한다. 그러므로 도에 가까운 것이다’로 풀이된다.

이처럼 물의 무위자연 원리를 도(道)로 설파한 노자의 사상에는 생명 존중과 환경 보존 정신만 깔려 있는 게 아니다.

노자는 인간세상의 이치도 ‘물처럼 흐르듯이 자연스럽기’를 희망했고 특히, 백성을 교화시키는 위정자들의 행위가 인위적이 아닌 무위자연의 도로 행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연히 노자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옹호하며 피아(彼我)간 상생하는 세상이 구현되기를 원했다.

반기문 총장이 평화주의자 노자의 핵심사상인 ‘상선약수’ 휘호를 임기를 1년 반 가량 남겨둔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점에서 또다른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다.

상선약수의 해독코드는 ‘환경’과 ‘평화’이다.

즉, 세계의 지도자가 미국 내 인종분쟁, 이슬람 테러조직 IS(이슬람국가) 처리 문제 등 국내외 산적한 난제들을 물처럼 유연하게 처리해 미국과 지구촌이 좀더 ‘평화와 안녕’을 구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반 총장 개인과 세계인의 공통 희망이 읽혀지기 때문이다.

이는 반 총장이 휘호 옆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을 한자로 ‘오파마(奧巴馬)’라고 적은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심오하고(奧), 친근하며(巴), 힘이 넘치는(馬) 사람”이란 뜻으로 직접 작명했다는 반 총장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리더십이 물처럼 깊고 편하게, 때론 힘차게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바란다는 염원을 담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상선약수’의 노자 사상을 꿰뚫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세계의 정부인 UN을 9년째 이끌고 있는 반기문 총장의 ‘의미있는’ 선물이 지구 보호와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인에게 각별한 이유다.

인류를 위해 더욱 평화롭고 윤택하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의 조정자로서 충분한 빛을 발휘하고 있다.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로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정신의 소증함을 전 세계에 일깨워주고 있다.

반 총장을 통해 목표를 향한 도전의식, 일에 대한 성실함, 역경을 이겨내는 끈기, 부족함을 채우는 열정, 사람을 대하는 순수함, 진실함을 배웠으며 나 또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리더로서 분야는 다르지만 함께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 인터넷생중계 : <http://assembtv.cb21.net>

●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buk/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 청원안내 |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날인),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제출사항

-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표시
-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구제 요구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 요구
- 조례, 규칙 제·개정 등 자치단체 소관업무 등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4

| 민원안내 |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민원은 진정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민원제출방법

- 우편민원 : (우)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진정 / 민원」에 글쓰기
- 전 화 : 043) 220-5154
- 팩 스 : 043) 220-5159

| 방청안내 |

■ 방청권 교부

- 방청권은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